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3면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8~10면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
13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나’였다
16면

문답으로
알아보는
노동개악
4~5면

서평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 14~15면
《자본주의와 장애》 12~13면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이 아니라 미·중 갈등 때문이다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관련 기사 3, 8~10면



윤석열의 '교육개혁'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윤석열은 '교육개혁'을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3대 과제로 꼽는다.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교육개혁'을 다시금 강조한 직후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학 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다양화", "공정"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수익성과 경쟁 논리에 교육을 더한층 종속시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첫 목표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도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임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고 말했다. 윤석열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교육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이런 강조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래 역대 정부들의 강조점이었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을 기업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게 하고, 산업과의 연계(산학협력)를 강조했다. 또 대학 자신이 기업처럼 수익 창출에 나서도록 부추겼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대학 정원 축소라는 양적 구조조정의 필요성까지 더해 '경쟁력' 없는 대학들은 적극 퇴출시키는 정책도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방향을 더한층 밀어붙이려 한다.

경기 침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도체처럼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한국 경제가 강점을 보이는 산업에서 확실히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

규제 완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 있던 대학 규제들도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

대학의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운영 등과 관련한 규제를 없애서, 자유롭게 학과 신설·통폐합, 대학 간 통폐합을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학과



윤석열은 수익성과 경쟁 논리가 지배하게 될 교육을 원한다

정원을 줄이지 않고도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위기에 처한 대학들도 학과를 신설하거나 통폐합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학교법인이 잔여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보장해 줌으로써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퇴출도 쉽게 하려고 한다.

경쟁력 있는 곳은 살리고 아닌 곳은 과감히 퇴출시키자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경쟁의 논리다. 윤석열도 "경쟁 중심의 자유 시장 구도가 교육 분야에도 형성돼야 한다"면서 이 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조치들이 도입되면, 이른바 '경쟁력 없는' 학과와 교수 퇴출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동안에도 인문·사회·자연·예술·계열의 학과들이 그 표적이 돼 왔다. 대학이 '취업 학원'이 되는 경향도 강화될 것이다.

이런 구조조정은 특히 지방 대학들에서 훨씬 심해질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학생과 교직원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동안 '등록금 장사'를 해 온 재단의 재산은 보호해 주려 한다.

그러나 왜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위기의 대가를 떠안아야 하는가. 오히려 대학을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이 있는 재단의 재산은 몰수해 국고로 환수하고 국공립화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 당국의 돈벌이도 부추기고 있다. 그동안에는 사학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창출한 수익을 대학의 교육에 쓰도록 해 왔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또 그동안 해 오던 '대학기본역량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아예 기업식 재무평가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채무가 많은 곳은 지원을 끊겠다고 한다.

재정 위기에 처한 대학들더러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 살아남으라고 한 것이다. 캠퍼스 내 상업 시설 확대, 학문의 상업화, 자산 매각 등이 더 날개를 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 여건과 교직원들의 처우도 더 공격받을 것이다. 이미 지난 20여 년 동안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이 벌어져, 대학 당국들은 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 교육 여건 후퇴 등을 강요하고, 교직원의 노동 조건도 공격해 왔다.

또, 정부는 검임·초빙교원 비중을 전체 교원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대폭 늘려 주려 한다. 비정규 교원을 대폭 늘리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기업들에게는 값싸게 양질의 노동력 공급과 기술 개발을 할 기회를, 대학 당국들에게는 더 많은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평범한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불안정과 경쟁 강화를 의미할 뿐이다. 대학 서열화와 지역 불평등, 교육 계급 격차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양질의 대학 교육을 위해 정부 지원

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대학 지원에 대한 권한을 예산이 훨씬 적은 지자체로 이양하겠다고 한다.

특목고 유지

한편,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각종 규제에 특례를 주는 지역을 선정해 운영하는 '교육자유특구'도 운영키로 해, 새로운 '귀족학교'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양성"을 명분으로 고교 서열화와 특권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입시 경쟁을 강화할 것이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키울 것이다. 윤석열이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나서자 민간 교육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교육 경쟁 강화는 부유한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즉 계급 불평등이 더 심화할 것이다.

윤석열의 교육 정책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그리고 경제 위기 하에서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고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시도의 일부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교육개혁'을 비판하지만, 귀족학교 만들기, 일제고사 부활로 경쟁을 강화한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 관련 정책들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큰 틀에서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집권했을 때 대학의 기업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정부의 '교육개혁'을 비판하는 대체로 올바른 입장을 냈다.

다만 정의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긴 것은 아쉽다 (이재량 대변인 브리핑).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현재로서는 모호하지만, 정부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부실 사학들은 문제이지만, 구조조정은 그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이런 대학들은 정부가 국공립화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이현주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1월 9일 <조선일보>가 ‘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 내용(압수수색 영장)을 입수 했으며 이를 1면에 단독 보도했다. 제주 지역 진보 정당에의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ㅎㄱㅎ’라는 지하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할 혐의를 적시한 것에 불과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우파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으로 보도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식이다.

그 직후 우파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또한 국가정보원과 경찰 보안수사대들이(이하 보안 기관들)이 흘리는 미확인 정보를 선정적으로 부풀리기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화일보>의 “방산업체 대거 해킹 정황 드러나” 기사도 자극적인 제목과 달리, 본문에는 보안 기관들이 그런 정황이 있는 듯해 수사하겠다는 내용이 었다. 사회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있는 양 심리적 불안을 조장하려는 보수 언론의 전형적인 보도 수법이다.

역다

보안 기관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시당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활동가들이 창원에서 처음 결성된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고 북한 측과 회합·통신했다는 혐의였다.

보안 기관들은 이 ‘창원 간첩단’과 ‘제주 간첩단’이 한 몸이라고 주장한다. 이



국가 보안 기관들이 간첩 사건을 터뜨리며 정보를 흘리고 보수 언론들이 선정적인 부풀리기 보도로 가세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들을 전국 간첩단으로 몰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인 듯하다.

“이번 지하조직 규모가 전국에 걸쳐 있어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문화일보> 1월 9일자)

‘중부지역당’ 사건은 1992년에 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가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62명을 일거에 구속하고 300여 명을 수배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었다. 안기부는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민자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좌파를 탄압하고, 우파를 결속시키는 데에 이 사건을 이용했다.

이번 ‘제주 간첩단’ 사건이 보도되기 일주일 전, JTBC는 서울중앙지검도 사건 수사를 위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다고 보도했다.

탄압의 표적

<조선일보>가 입수했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면, 보안 기관들은 제국주의적 군사 훈련을 반대하는 비폭력적인 운동을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만들고 있다.

“한·미 합동 군사 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미국산 침

단 무기 도입 반대 등 구호를 들고 항의 집회, 항의 방문, 서명 운동 같은 대중 투쟁을 연속 전개하라”

“[윤석열 반대] 촛불 세력과 연대하고 중도층을 규합해 반정부투쟁에 나서라”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청주 평화 활동가들에게 덧씌운 마녀사냥 프레임을 재연하고 있다.

실사 운동 내 누군가가 북한 당국 측 인사와 회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화적인 정치 활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역대 남한 정부들은 북한과의 ‘회합·통신’ 문제에서 언제나 이중잣대를 들이대 왔다.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북한 당국과 접촉할 수 있는 반면, 좌파 활동가와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이나 탈북민들이 그렇게 하면 엄한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운동 내 일부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느냐는 전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비판해 온 정의당이 지금까지 이 활동가들에 대한 방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쉽다.

이번 탄압이 실제로 노리는 것은 반제국주의 운동과 노동 운동의 위축·분열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이태원 참사, 퇴진 촛불 운동, 노동개약 반대 정서 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탄압을 강화하려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라 남·북 간 긴장도 커지자 탄압과 군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간첩 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려 ‘북한 위협’을 과장해 억압적 통치를 강화하는 것은 보수 정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용하던 전통적 수법이다. 1967년 동백림 사건, 1974년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1992년 중부지역당 사건, 2013년 통합진보당 사건 등,

심지어 2013년 탈북민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문 사건처럼, 좌파 활동가가 아닌 애먼 일반인에게까지 증거를 꾸며내 간첩 누명을 씌우기도 했다. 당시 국정원과 공안 검사들은 항소심에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증거로 내놓는 부패한 짓을 벌이다 결국 들통이 났다.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공안 검사 출신 이시원은 윤석열이 취임 직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앉았다.

김승주

이번 탄압이 실제로 노리는 것은 반제국주의 운동과 노동 운동의 위축·분열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이태원 참사, 퇴진 촛불 운동, 노동개약 반대 정서 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탄압을 강화하려 한다



사진: 이대원

노동개악을 둘러싼 쟁점들 Q&A

Q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은 무엇을 노리나?

윤석열이 내놓은 노동개악은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비정규직(파견) 확대, 쟁의권 후퇴 등을 노리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과 사용자들의 이윤을 지키려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노동개악의 목적을 '노조 탄압'으로 보는 것은 협소한 관점이다.

2020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퍼센트인데, 노동개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의 조건 전반을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는 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단지 조직된 노대기업 정규직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 낱알은 전체 노동계급을 향하고 있다.

물론 단체협약 같은 보호망이 없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더 불리한 처지에 있는 미조직·중소·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격에 더 취약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파견법 개악 등은 저임금·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분적이고 경제적인 노동조합주의의 눈으로 보면 노동개악에 정치적으로(즉, 전 계급적으로) 맞서기 어렵다.

윤석열이 노동조합을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 마녀사냥식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노동조합 전반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보는 것도 부정확하다. 윤석열 정부를 "군부 독재"나 심지어 "파쇼 정권"으로 묘사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정부 탄압이 노리는 것은 전 투적이고 급진적인 저항이고, 이를 위해 노동운동 내의 갖가지 기존 분열을 한껏 활용하려 할 것이다.

Q 대기업 정규직의 상대적 고임금은 임금 격차만 벌릴 뿐인가?

임금체계 개악은 윤석열 노동개악의 핵심 목표다. 특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급제를 손보려 한다. 고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해 전체 노동계급의 임금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노동운동의 일각에서는 임금체계 개악에 확실하게 반대하길 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가령 정의당은 직무성과급제를 분명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일부 노동단체도 임금체계가 무엇이든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직무성과급제 반대하기를 삼간다.

이런 회피적 입장들의 인식의 바탕에는 대기업 정규직의 상대적 고임금이 중소기업·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갉아먹거나 격차만 벌릴 뿐이라는 관

점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조건을 개선하면 중소기업·하청 노동자들의 조건도 결국 동반 상승한다. 한 부문의 임금 인상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싸울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그 격차는 투쟁의 결과와 기업주들의 이윤몫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보면, 정부의 '기득권 개혁' 논리에 일관되게 반대하기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가진 힘을 전체 노동계급의 조건을 함께 방어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연결시키기보다 조합주의(부문주의와 경제주의)를 부추길 것이다.

Q 직무급제는 차별을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노동운동의 일부가 임금체계 개악을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 데에는 직무급제가 차별을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라는 생각도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직무급이 차별 해소를 고무하는 것은 아니다. 되레 직무에 따른 임금 차별을 정당화한다. 가령 무기계약직이 된 많은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호

봉제 적용을 원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먼저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해 직무급제(임금 표준모델)를 마련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비정규직 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전체 노동계급의 임금 상승이 억제되는 효과를 내기 쉽다. 정부가 정규직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도 주로 이 목적을 위해서다.

직무급제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 것도 아니다. 직무 평가는 대개 시장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임금 차별을 그대로 반영하기 일쑤다. 직무급제가 흔한 서구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다.

Q 직무 평가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면 나아질까?

노동운동의 일부는 직무 평가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산별교섭에서 직무 가치를 평가하는 독일식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참여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직무에 차등을 매기고 임금을 그에 연동하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근본적 문제점은 여전하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이 조장될 수 있고, 직무 간 임금 격차가 '공정하다'는 거짓 정당성이 부여된다. 직무

▶ 5면으로 이어짐

▶ 4면에서 이어짐

급제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도하는 장치”라는 전투적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독일처럼 산별 협약으로 직무 평가를 하는 방법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낮은 임금 등 급을 추가하는 개약에 합의하거나(공공 부문), 신입사원들의 임금 하락에 합의하는(금속산업) 등 후퇴를 거듭해 왔다. 협상 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직무성과급제가 인건비 부담을 억제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도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이에 배신적으로 타협한 결과다.

임금 차별 해소는 직무 평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들 간의 계급 세력 균형에 달려 있다. 이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노조 지도자들의 협상 기술이나 교섭 전문성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성과 급진성이다.



1997년 초 2주간의 정치 파업 조직 노동계급이 단호하게 싸우면 개약을 일정하게 막을 수 있다

Q 임단협 시기 집중 투쟁이 효과적인가?

그동안 노동개약에 맞선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대응은 개약 입법을 코앞에 두고 단발성 하루 파업을 하는 데 그치고, 정부 행정지침에 따른 공격은 사업장별로 내맡겨 두기 일쑤였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은 “뺑파업”이라는 비아냥을 종종 듣는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민주노총 중앙은 이번에는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대중적이고 완강한 2주간의 파업”을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주요 노조들의 임단협이 몰려 있는 7월 초중순에 2주 동안 임단투 시기 집중(그러나 릴레이) 파업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2~3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약 추진에 나선다는데, 왜 7월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임단투 시기 집중’은 다같이 싸워 투쟁 효과를 높여 보자는 취지에서 제기됐지만, 실천에서는 각자 자기 사업장의 임단협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부문주의와 경제주의의 약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이미 20년 전인 2001년, 효성 파업이 한 사례이다. 6월 초 효성 공장점거 파업에 김대중 정부의 경찰 수천 명이 투입돼 폭력을 휘둘렀을 때,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항의가 커지고 태광·고합 노동자들이 파업에 가세하면서 투쟁은 전국적 초점을 형성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만만

찮은 연대 파업을 조직하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남북한 관계 개선 문제에 관련된 노동조합 내부 이견 때문이었다.

게다가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는 6월 12일 시기집중 파업을 앞두고 협상을 마무리하고는 대열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자기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부문주의와 경제주의 때문에 정부의 공격을 막아 내지 못했다.

비슷한 문제는 2004~2006년 비정규직법 저지 투쟁, 2009년 쌍용차 파업 지원 때에도, 그리고 2010년대 이래로 거의 매년 추진된 총연맹·산별노조 차원의 ‘시기 집중 파업’에서도 거듭 반복됐다.

지난해 하반기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그 약점이 드러났다. 당시 공공운수노조의 시기집중 파업은 연대를 모아 내지도, 철도노조 지도부의 배신에 제동을 걸지도 못했다.

결국 노동조합 지도층에 진정한 실질적 연대를 의존하는 전략은 기껏해야 미온적인 이득을 얻기 일쑤였고, 가끔씩은 실망과 환멸을 안겨 주기도 했던 것이다. 진정한 실질적 연대와 단결은 현장 조합원들 자신이 구축해야 할 일이다.

Q 개약 저지보다 개혁 입법화를 내걸어야 하나?

선거와 의회를 중시하는 좌파는 임단협 시기 집중 방식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중앙 차원의 법제도 쟁취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노동개약이 순차적이고 여러 방식이기

때문에 ‘저지 투쟁’을 하기보다 개혁 입법 요구들을 모아 싸우는 게 동력을 한데 모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면 개약에 맞서는 것을 개별 사업장의 과제로 원자화하고, 하나의 계급으로서 만만찮게 맞서기는 회피하면서 입법파 투쟁을 잘 할 수 있을까? 임금 등 조건 하락에 맞서 단결하지 못하는 노동계급이 개혁 입법을 위해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등 지난 몇 년의 제도 개선 투쟁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의 동력을 모아 내기보다 국회 논의에 기대어 전개되기 일쑤였다. 노동운동 지도부들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중심에 놓기보다 국회 논의에 투쟁을 종속시키고, 결국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좌지우지되는(그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약점을 거듭 보여왔기 때문이다.

Q 그간의 노동개약 저지 투쟁은 무엇을 보여 주나?

1996년 12월 26일 새벽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저항이 터져나왔다. 기층 조합원들에게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파업을 명령했다. 2주간 최대 38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비록 민주노총 지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엄격하게 통제된 파업이었지만, 그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정치 파업이었고 정부와 사용자들을 크게 위협했다.

결국 정부는 날치기 통과시킨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도입을 일단 유예하고 ‘적법 절차’를 밟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수요 파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약을 전면 철회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말이다.(노동개약은 이듬해 “IMF 위기”가 한창이던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그 파업은 노동계급의 잘 조직된 부분이 단호하게 투쟁에 나서면 개약을 일정하게 막아 낼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직무성과급제와 해고 요건 완화는 박근혜 퇴진 운동에 부딪혀 좌절됐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직무성과급제 반대 투쟁이 퇴진 운동 발전에 중요한 발판을 놓았다. 그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국노동자대회는 퇴진 운동의 대열을 크게 늘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중 파업을 호소하지 않았고, 특히 경제 투쟁들은 분출하지 않았다. 더구나 정의당과 당시 공공운수노조 지도자들은 민주당 정치인들과 조율해 철도 파업을 중단시켰다.(바로 그날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했다.)

‘헌정 질서’에 따른 탄핵 절차를 밟아, 아래로부터 불만을 의회 정치 안으로 흡수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는 폐지됐지만,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됐다.

이렇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당시의 경험은 지금의 노동개약 저지 투쟁도 반윤석열 정치투쟁과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준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주류 좌파 정당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저항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제한적으로만 하고, 특히 정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길 회피한다. 특히,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소심함과 우유부단, 궁극적인 경제주의가 거듭 약점으로 작용해 왔다.

윤석열의 맹공에도 노동자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광범하게 단결하려면 이런 개혁주의적 약점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가 기층에서부터 필요하다.

박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중무기로 완전 무장시키고 있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정책이 크게 바뀌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중무기 제공하기를 꺼렸다.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들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해 두 핵 강국(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 충돌을 촉발시킬까 봐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21일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중 가장 첨단 무기다.

〈뉴욕 타임스〉(2022년 12월 13일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 미사일의 제공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깊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다.”

바이든은 처음에는 패트리엇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옛 소련제 대공 시스템인 S300 미사일이 다 떨어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기 관련 기반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하자 입장을 바꿨다.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군은 S300 미사일을 250기 보유했다. 옛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이 자국 보유 S300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보유 미사일은 훨씬 더 빨리 소진됐을 것이다. 이 미사일은 부품을 구할 수도 없다.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전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 벤 호지스는 이렇게 말했다. “50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 대대 또는 연대는 러시아군 방어선을 돌파하는 철권이 될 수 있다.”

영국도 자국의 주력 전차인 챌린저2 전차 10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지금까지 중전차(重戰車)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국가는 없었다.

독일은 마더 장갑차 40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경전차 AMX-10RC 10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나토 회원국들이 이런 무기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목표가 우크라이나 방어가 아니라 러시아 공격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 서방은 이런 무기들을 지원하며 이 전쟁이 대리전임을 자인하고 있다

폴란드와 핀란드는 자국이 보유한 레오파르트 전차(독일제)를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우크라이나에 알렸다(이는 독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를 더 공격적으로 바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가 군대를 재정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탈환하도록 지원하려 한다.

소모전

한편,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중무기 제공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다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인 유리 이그나트 소령은 이렇게 말했다. “수백기의 로켓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우리가 그중 70~80퍼센트를 떨어뜨리면 우리도 방어 무기가 소진되지 않겠느냐.”(〈파이낸셜 타임스〉, 2022년 12월 14일자)

그러나 나토는 무기와 탄약의 소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상치 못한 소모전을 치르며 군사 물자 조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속도로 무기와 탄약을 사용하고 있다. … 탄약을 얼마나 쏟아부을 수 있느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뉴욕 타임스〉, 2022년 12월 26일자)

나토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난여



미국이 지원하는 브래들리 장갑차

름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하루 6000~7000발, 러시아는 4만~5만 발의 포탄을 쏘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쏘는 하루 포탄 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나토가 한 달 동안 쏘아 낸 수보다 많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은 한 달에 고작 1만 5000발에 불과하다.

제한된 탄약 재고와 생산량으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지원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포탄을 비롯해 무기 지원을 한국에 거듭 요청하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교묘하게 미국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7면에 실린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한국 윤석열 정부’를 보시오.)

러시아도 무기와 탄약이 소진되고 있다. 러시아는 순항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를 축내지 않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란제 자폭 무인기를 사용해 왔다.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내전 동안에 관계가 긴밀해졌다.

러시아는 자체 무기 생산을 늘리려 애쓰지만, 서방의 제재 때문에 핵심 부품을 수입할 수 없어 미사일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듯하다.

출혈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러시아군의 초반 승리를 얼마간 뒤집었다. 나토가 제공한 무기 시스템이 결정적이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지원국은

▶ 7면으로 이어짐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한국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대리전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낳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재앙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 1월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구입하는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 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폴란드 정부와 가까운 싱크탱크 인사의 말을 인용해,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군의 레오파르트 전차 240여 대를 전부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이며, 그 전차들을 “얼마나 빨리 우크라이나에 보내느냐는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자들에게 주문한 대체 전차들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즉,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어 생길 전력 공백을 미국과 한국의 새 전차들이 채워 줄 것이라는 말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간접 지원하는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갈수록 위력적인 무기를 지원해 왔다. 침공 이래 러시아군은 여러 중요한 후퇴를 겪었지만, 여전히 여러 전선에서 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280억 달러(약 35조 원) 상당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려 한다. 여기에 브래들리 장갑차 50대가 포함될 예정이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우크라이나



윤석열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무기 수출은 핵전쟁 위험 키우기에 일조하고 있다

에 경장갑차 AMX-10 RC를 보내겠다고 했다. 미국이 얼마 전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지난 몇 달 동안 해 온 요구에 대한 서방의 응답이다. 물론, 젤렌스키가 정확히 요구한 것은 전차였지만 말이다.

그러나 폴란드가 그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로 가는 한국산 무기가 이를 돕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무기 재고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군수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죽음의 상인’ 노릇에 앞장서며 군수산업

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무기 지원은 전쟁을 키우고 핵전쟁의 위험을 높일 것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수많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의 고통 또한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 등 전쟁이 초래한 비용을 떠안고 있는 전 세계 보통 사람들의 삶도 계속 악화될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전쟁 지원은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강대국들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말 푸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양국 관계를 파멸시킬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 이와 같은 방향으로 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현재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혐의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것이 맞다면 러시아는 분명 그에 대한 대가를 북한에 제공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응해 자원이나 경제적 지원이 아닌 군사적 지원을 그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제국주의 지원 정책이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도 일조하는 것이다.

이원웅

▶ 6면에서 이어짐

물론 미국이다. 미국은 개전 이래 지금까지 229억 달러(약 29조 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했다.

둘째 지원국은 독일로, 23억 달러(2조 8669억 원)를 지원했다.

그다음으로 폴란드가 18억 달러(2조 2437억 원)를 지원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옛 소련제 군사 장비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가 10억 달러(1조 2465억 원), 프랑스가 5억 달러(6232억 원)로 그 뒤를 잇는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감수하는 경제

적·군사적 출혈은 막대하다.

서방의 일부 전략가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최대 전략 경쟁국인 중국과 맞서 서방의 방위력이 약화될까 봐 우려한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국방 분석가 잭 와틀링은 이렇게 말했다.

“일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확전으로 이어질까 봐 두려워하지만, 미국이 패트리엇 시스템 제공을 꺼렸던 주된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세력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자체 작전 분석에서 제시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수의 패트리엇을 보유하고 있다.”(<가디언>, 2022년 12월 20일자)

광기 경쟁

우리는 무기 경쟁이 불붙은 시기에 살고 있다. 세계 군비 지출은 역사상 처음으로 2021년에 2조 달러를 넘었다(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발표).

1위는 미국으로, 8010억 달러(999조 7000억 원)였다. 2위는 중국(2930억 달러; 365조 7000억 원), 3위는 인도(766억 달러; 95조 5000억 원)였다.

한국도 502억 달러(62조 6000억 원)를 군비에 지출해 10위를 차지했다.

2022년 세계 군비 지출과 관련한 전체 통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증가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20세기 전반부의 역사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당시 열강의 지배계급들은 재무장과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혔고, 그 광기는 1914년과 1940년에 폭발했다.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치르며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혈낭자한 도살장이 됐다.

물론 역사는 고스란히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상충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경 안팎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아류들의 광기를 저지할 투쟁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김인식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김영익

이 기사는 1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QR코드에서 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려되는 상황 전개를 눈으로 보고 있다. 전쟁 위기가 당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긴장이 쌓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월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다량 생산,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정찰위성 발사 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4월까지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낸다고 발표했다.

3월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상륙훈련이 포함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가 맞물려 올봄에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맥락을 보자

이런 긴장은 적어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누적돼 왔다. 동해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등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북한은 이에 대항해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사일을 40차례 가까이 발사했다. 9월에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해, 유사시 핵무기를 적극 사용할 것임을 명시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강경 대응을 하면서 이미 긴장된 상황을 더 긴장케 만들고 있다. 윤석열은 무인기 사태에 대응해 한국군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쪽으로 보냈다. 그리고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준비”, “응징 보복” 등 온갖 호전적인 말을 쏟아냈다.

물론 윤석열이 그런 말에 걸맞은 행동에 바로 돌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그런 말 자체가 불안을 키우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위협하게도 핵무장론이 거둬 나오고 있다. 윤석열 자신이 미국과의 공동 핵연습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차기 여당 당대표 후보 김기현도 한국 자체의 핵무장이 궁극적인 북핵 대응책이라고 주장한다.



국방부 제공

(위) 한미 양국이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 랜서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운 것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것이다

(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주도의 경제 봉쇄(제재)와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사단출처 조선중앙통신

〈조선일보〉 등 다른 우파들도 “미국 전술핵 재반입이든 독자적 수단이든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핵무장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의 “강 대 강” 대치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크다. 예컨대 1월 7일 정육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이 대화에 흥미를 잃고 전술핵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도 미국의 핵 공유와 9·19 군사합의 종료 검토 등 강수만 둔다고 비판했다.

이런 “강 대 강” 대치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다만, 현 상황을 남북 대결 중심으

로 본다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더구나 북한의 대응을 더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북핵과 한반도 상황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중 간 제국주의적 경쟁이 계속 심화되는 더 큰 맥락을 봐야 한다.

제국주의적 갈등 속의 한반도

앞서 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처한 대외 환경에 대한 관점을 직접적으로 밝혔다. “국제 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들어 각종 핵타격수

단을 남한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자주들이밀고 있다. 일본, 남한과의 3각 공조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시아판 나토 형성에 골몰한다. … 남한은 무분별하고 위협천만한 군비 증강에 광분했다.”

김정은의 보고는 북한 지도층이 커다란 외부 압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쟁은 인도-태평양에 커다란 불안정을 조성할 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직접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현재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8월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는 미·중 갈등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 줬다.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벌였다.

이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을 대만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만 문제에 대

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는 신호로 주목받았다.

시진핑도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일본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일본은 국가안보전략 등 주요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소위 '반격 능력'이라는 선제 공격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일본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미국산 무기 수입에 올해에만 14조 원가량 쓸 예정이다.

미·중 갈등은 인공지능, 5G,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경쟁으로도 불붙고 있다. 여기서 주도권을 쥔 국가가 경제는 물론 군사력에서도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는 앞서 열거한 첨단산업은 물론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필수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것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잇달아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고, 중국에 반도체 투자와 핵심 장비 수출을 하지 말라고 동맹국과 그 기업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냉전이 고착됐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북·중·러'와 '한·미·일'이 새로운 냉전으로 대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 악화로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 사이에 분열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과거 냉전 때와 다른 점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역내 주



요국들의 경제적 상호 의존이 여전하고 이 때문에 국가들의 선택에 모순이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완전히 선택하지 않은 국가가 여전히 많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한 차원 발전시킬 의도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내놓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전략을 담은 보고서에 노골적인 중국 배제로 보이는 표현은 넣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차이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우선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이런 상황은 균형이나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몸부림과 중국의 도전이 맞물리면서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동맹국들을 더욱 결집시키기 위해 "북한의 핵 위협" 등 온갖 명분과 수단을 강구해 온 것이다.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중 갈등은 몇 가지 매개요인을 통해 한반도 긴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대만과 남중국해 등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한반도가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주한미군 기지와 제주해군기지 등은 대만으로 가는 미군의 발진 기지가 될 것이다.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은 한국의 더 많은 기여를 바란다.

또, 미국은 한·미·일의 군사 협력을 증대하고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인데,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명분이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북한 '위협'이 지속되면 역내 미군 주둔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북핵 대응 수단으로 핵무기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확장 억제' 강화를 확인하고,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일 연합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3국의 이런 행보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도 자극한다. 동해에서 벌어지는 한·미·일의 미사일 대응 훈련과 서해

▶ 10면으로 이어짐



사진 출처: 미 해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전투기 수송 대를 싣고 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

▶ 9면에서 이어짐

군산으로 날아오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등은 모두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겨냥하는 것임을 둘 다 잘 안다.

이 같은 미·중 갈등이 한반도 긴장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특히 지금, 그 속에서 진행되는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긴장을 높이고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미국의 동맹 강화와 군사력 배치, 일본의 군비 증강 등이 가하는 압력에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로 대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현 상황에 돌파구를 낼 수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군국주의 강화는 이런 상황의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는 앞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예산도 크게 늘렸다. 북지 지출은 삭감하면서 말이다. 게다가 이미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 국내총생산보다도 훨씬 많다. 윤석열 정부는 2023~2027년에 대북 선제 타격 계획이 포함된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에만 30조 원 넘는 돈을 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협력해 대북 선제 타격과 참수 작전 계획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을 북한이 가만히 볼 리가 있을까? 북한이 선제 타격이나 참수 작전이 임박해 보이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핵무력정책법에 명시한 까닭이다.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2023년 첫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이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고 전술 핵 탑재까지 가능한 무기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당장 한반도에 전쟁이 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적 갈등이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동맹 강화, 군비 증강 등으로 상황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처럼 긴장이 쌓이면 장차 통제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개혁주의의 입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을 비판하며 평화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서 일관되지 못하고 흔히 불철저했다. 민주당도 한국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그 나름으로 대변하려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통과시켜 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런 일이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을 자극해 불안정 악화에 일조하는데도 말이다.

무인기 사태를 맞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탓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안보 대응 태세가 부실한 안방 여포”라고 비판했다. 아마도 이렇게 주장해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망쳤다’는 우파의 주장을 제대로 맞받아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우파의 안보·국방 강화 논리에 힘을 실어 주고 결국 한반도 불안정 증대에 일조할 뿐이다.

정의당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타하는 한편, 한·미·일 동맹 강화와 남

북 군사합의 중지 거론 등 윤석열의 강경 행보를 비판했다. 이정미 당대표는 윤석열의 호전적 발언이 국민을 불안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 대한 정의당의 주장에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다. 1월 1일 정의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렇게 촉구했다. “남북 위정자들의 강 대 강 대결 구도”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되지 않으니 둘 다 “악수(惡手)”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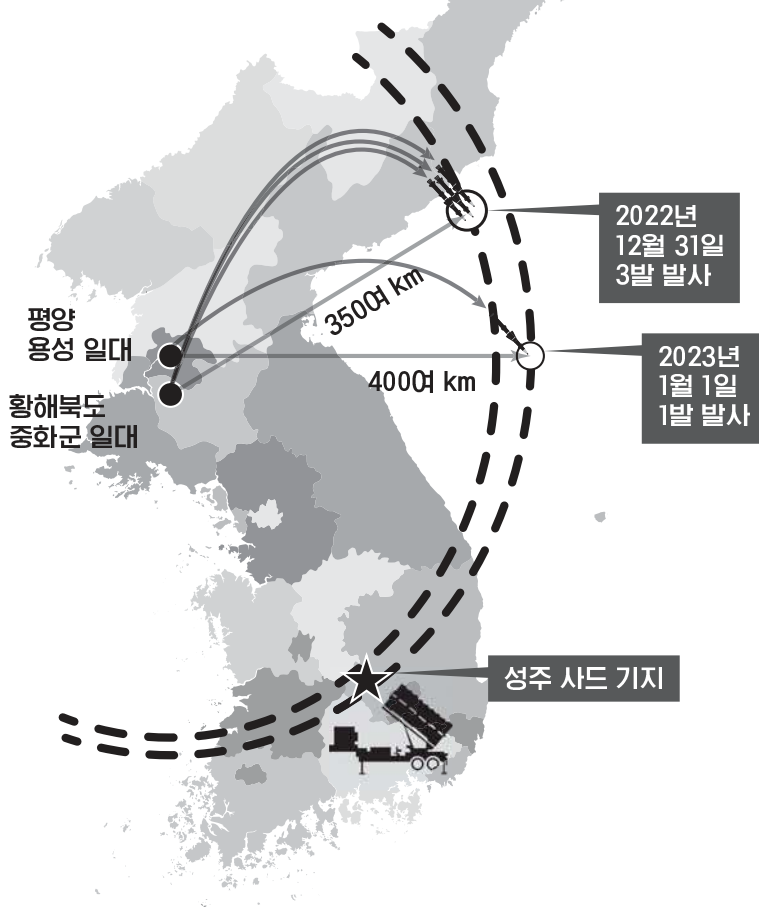
‘양측 모두 호전적인 행동을 자제하라’는 이 같은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 자칫 군사 행동을 먼저 하는 쪽이 긴장 고조의 원흉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에 나선다면 정의당 지도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분명 그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이라는 맥락 속에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전혀 일관되지 못했고 흔히 불철저했다

북한 방사포 KN-25의 사정권



벌어지는 일일 텐데 말이다.

남북 양측을 대칭적으로 비판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정부의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단호하고 일관되게 반대할 수 없다.

노동당은 장혜경 정책위 의장이 지난 달 15일에 낸 글에서 한미동맹을 옹기 비판했다.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 포위 전략에 동참시키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방치”했고, 윤석열은 “한미 동맹 강화와 선 비핵화”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장혜경 의장은 중국 포위에 나선 한미동맹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한편, “한반도 위기 해결의 시발점”으로서 “쌍중단”(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한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북한 핵과 미국 핵을 모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의 반핵·반전 목소리”를 제시한다.

이는 ‘미국 핵과 북한 핵이 맞붙어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그의 인식과 관련 있다. 파국을 막으려면 일단 대립하는 양측 모두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핵에 반대하는 것은 원칙상 옳다. 그러나 이를 추상적 원칙을 넘어 구체적 전술·전략으로 채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모든 핵 반대 식의 입장은 “진정한 적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흐려 자국 정부의 군국주의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점도 흐리게 될 수 있다.

미국 핵과 북한 핵을 대등한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 중간 규모의 공업국인 북한의 관료들은 한·미·일의 막강한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공격 위협 속에서 핵무기에 집착하게 됐던 것이다. 둘 다에 반대한다는 슬로건은 다수 대중의 평화 정서에 호소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침으로는 ‘우리’ 정부에 반대할 급진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을 결집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 긴장은 제국주의 문제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경쟁이 한반도에 가하는 압력의 반영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좌파는 서로 경쟁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해서는 안 되고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지배자들이 협력하는 미국 제국주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친제국주의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폭행으로 탈장까지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이하 “여수외국인보호소”)에 6개월 동안 장기 구금 당했던 예멘인 난민을 기자가 만나 그 끔찍한 경험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4월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됐다. 본 인터뷰는 그와의 대화를 토대로 재구성했다.

“제 이름은 A·Z이고, 예멘인 난민입니다. 한국에는 2018년 제주도로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예멘의 수도 사나 출신인데, 2017년 당시 내전이 악화되면서 폭격과 파괴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우선 말레이시아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도 상황이 어려웠는데, 한국의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그곳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는 목포 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일하고, 전국 곳곳의 공장을 전전하면서 일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2019년에 다른 예멘인들과 문제가 생겨서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2020년에 재판에서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는데, 그러자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매년 갱신할 수 있었던 인도적 체류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체류 허가를 연장하러 출입국·외국인청을 갔는데, 제 신분증을 가져가서는 한 달 내로 출국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이면 한 달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저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다시 가면 구금돼 추방될까 무서워서 가지 않았어요. 예멘은 전쟁 중이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체류 허가 없이 1년을 지냈어요.

그러다 다른 예멘인과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경찰은 제가 신분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했어요. 그렇게 여수외국인보호소에 2021년 10월 24일에 구금됐습니다. 구금된 다음 저는 어쩔 수 없이 예멘으로 추방되겠다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그런데 예멘으로는 직항이 없습니다. 오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국가를 경유해 가야 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예멘인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



A·Z 씨가 적십자병원에서 발급 받은 치료 영수증과 수술 안내문이 수북히 쌓여있다

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몇 개월 내내 여러 대사관에 연락하면서 출국할 방법을 찾았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예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보호소 측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를 구금해 놓고 있었어요. 대우도 정말 안 좋은데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보호실 문을 잡고 흔들면서 두들겼어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폭력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열리고 보호실 경비 인력 4명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 명은 제 양팔을 각각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바닥에 때려눕혔어요. 다른 두 명은 제 배를 발로 짓밟기도 하고, 다리를 모으지 못하게 붙잡고서 사타구니 사이의 민감한 부위를 사정없이 발로 걷어찼어요. 너무나 야만적이었어요.

그렇게 구타당하고 방에 남겨졌는데, 그날 밤이 되자 배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며칠 내내 요청했는데 직원들은 저를 계속 무시했어요. 보호소 내 의료진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진통제만 계속 줬어요. 의사는 아니었는데, 그가 보기에 제 상태가 심각했는지 결국 보호소 직원들에게 “상태가 안 좋으니 병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요.

보호소는 그제서야 저를 외부 병원

에 데려갔습니다. 폭행 이후 열흘 만이었어요. 3월 28일이었는데, 순천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 순천의료원 의사는 제가 탈장됐으므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통제를 처방해 줬습니다. 보호소 측은 “법대로 한 일이지 하지만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SNS나 언론에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며 구금에서 풀어 주겠다고 했어요. 같이 구금돼 있다가 언론에 내부 폭로를 했던 이집트인 난민 친구는 직원들의 미움을 사서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다 결국 추방됐어요.

애초에 구금을 해제해 주겠다는 건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호소 내에서 문제가 커지면 안 되니까 일단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보호소 측은 저에게 2년 동안 조용히 지내면 신분증을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추방당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야만적인 일을 겪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결국 제 돈으로 보증금 300만 원을 내고 4월 15일 보호일시해제를 승인받아 여수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사실 이 인터뷰도 처음에는 할지 말지 고민이 들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 이야기를 알리고 진정을 했으니, 그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볼까도 했어요. 언론에 먼저 알렸다가 보호소 측으로부터 보복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지 두 달

이 넘었는데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난민들이 겪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인터뷰 보도를 결심했어요. 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하고요.

결국 6월 9일에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수술받고 지금까지도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보호소 측은 아무 지원도 해 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비 90퍼센트를 부담해 줘서 수술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는 당분간 힘쓰는 일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월세와 생활비는 어떻게 내나요? 그래서 다시 인력사무소로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아팠어요. 지금은 주 1~2회 정도만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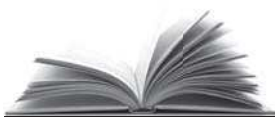
사실 보호일시해제로 풀려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해제 될 때 보호소 직원에게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은 “그냥 몰래 일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체류 허가 없이 일하다 단속되면 다시 보호소에 구금될 텐데, 그럼 그 직원이 책임질 건가요?

저는 보호소에 구금되기 전엔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았고, 건강했어요. 지금은 조금만 힘을 써도 힘들어요. 건강하게 들어가서 망가져서 나왔어요. 그렇게 폭행당하고 나니 그 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멘으로 돌아가게 돼도, 저는 더 이상 고향을 수가 없어요.

대체 왜 그렇게 야만적으로 저를 폭행했을까요? 차라리 팔이나 다리를 맞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팔은 부러지면 다시 붙기라도 해요. 그런데 제 민감한 부위를 그렇게 야만적으로 폭행당하고 나니 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모두 무너졌어요. 너무 슬프고 억울합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저 같은 예멘인, 난민, 미등록 이주민에게 불법 행위가 저질러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저에게 이런 폭력을 저지른 이들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이런 부당한 처우를 모든 한국인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정리 박이랑



서평 |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고작 0.8퍼센트(106억 원)만 반영했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은 “무려 106억 원”이라고 생색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시 산하 공기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최근에는 이들의 지하철 탑승을 아예 막고 있다.

이런 작태들은 권력자들이 장애인 권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전장연의 투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아주 반가운 책이 출간됐다. 지난해 11월 나온 마타 러셀의 책 《자본주의와 장애》가 그것이다.

미국의 사회운동 활동가인 마타 러셀(1951~2013년)은 선천적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청소년 시절에 1960년대 민권운동을 목격하며 급진화했고, 1980년대 말 장애인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정치 개념으로서의 장애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기회 차단에 대항한 시위를 조직하기도 하고,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에도 참여했다.

그 시기 러셀은 카를 마르크스, 하워드 진, 놔 촘스키 등의 저술을 폭넓게 공부하며 자신의 사상을 다듬어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러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의 본질과 미국 장애인 운동의 쟁점들을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여러 글을 발표했다. 《자본주의와 장애》는 1998~2005년에 마타 러셀이 쓴 에세이 19편을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왜 계속되는지, 차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장애인 차별의 본질

흔히, 장애는 개인의 손상이나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여긴다. 장애를 이렇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생산 활동에서 쫓겨났고, 이는 장애인 차별의 근본 바탕이 됐다

게 정의하면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것, 불가피한 것, 개인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러셀은 “장애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범주이며 노동 관계에서 비롯”하며, “자본가 사회의 착취적 경제 구조의 산물”이라고 규정한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종교적 미신이나 박해는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가족 단위로 생산이 이뤄졌기 때문에 장애인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농업이나 가내 수공업 등에 참가해 일상적 경제에 기여했다.

이와 달리,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 더 적은 비용을 들여 더 빠른 속도로 생산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한 분업화된 집단 노동, 생산의 자동화 등에서 장애인들은 개별적 지원·보조가 없으면 규격화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장애인들은 생산 활동에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졌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임금 노동자로서 착취되는 것 자체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임금 관계로 강제 편입했듯, 장애인 노동자를 강제로 임금 관계에서 몰아냈다.”(23쪽) ‘1부 장애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자본

주의에서 장애인이 왜 차별받고 배제되는지, 이윤을 위해 장애인은 어떻게 이용되는지 설명한다.

때로 자본가는 장애인을 고용하기도 하는데, 저임금을 통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그렇다. 예컨대, 미국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도록 “강제”한다. 최저임금의 20~30퍼센트만 지급하는 곳도 있다.

한국에서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를 가진 경우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이 받는 임금은 월 평균 37만 9622원(2022년 8월)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20퍼센트 수준이다.

러셀은 장애인의 저임금이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고 지적한다. 가령 클린턴 정부의 장애인 고용 증가 정책은, 장애인 복지를 줄이고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이 새로운 산업 예비군을 활용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장애인 권리 보호법의 한계

러셀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개혁 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하지만 그 한계도 날카롭게 짚는다.



자본주의와 장애 — 물질적 풍요에 숨겨진 차별과 억압의 역사

마타 러셀 지음, 키스 로준솔 엮음,
조영학 옮김, 동아시아, 336쪽, 17,000원

‘2부 시민권과 퇴보’에서는 민권법에 기반한 미국 장애인 권리 운동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룬다.

19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장애인법(ADA)에 따르면,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거부할 수 없고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에 노동 적령기 장애인의 29퍼센트만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비장애인은 79퍼센트가 고용돼 있었는데 말이다. 2020년 조사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은 30.9퍼센트로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고용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4.6퍼센트에 불과하다. 전체 고용률 62.7퍼센트의 절반 수준이다.(2021 장애인 통계)

고용 차별에 맞서 소송을 하더라도 장애인 노동자가 이길 가능성은 많지 않다. 체제 수호 기관인 대법원이 행정부나 기업의 손해를 면해 주기 위해 얼마든지 민권법에서 장애의 정의를 제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러셀은 여러 사례를 들어 사법기관이나 법 규정을 통해 차별을 끝낼 수 없음을 생생하게 설명한다.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인가?

1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이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기본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꼽은 것은 윤석열의 의도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을 더 오래 일 시키면서도 임금을 억제하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저항 수단인 쟁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올해 시무식에서 “반법치 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하여 법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한동훈은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불모로 한 불법 집단 행동, 산업 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 금품 갈취, 공사 방해 등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반법치 행위”의 사례로 들었다.

이 말들을 들으며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점거 파업, 건설노조 등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스트롱맨’

치안의 이름으로 범죄 소탕을 강조하며 서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우파 정부들의 전형적 수법이다.

근래에는 미국의 트럼프,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필리핀의 두테르테, 인도의 모디 등이 “법과 질서”의 수호를 강조했다. 프랑스의 파시스트 정치인 르펜도 대통령 선거에서 “법과 질서”의 확립을 내세웠다. 북한 위기와 정치 불안정 심화 때문에 때때로 중도파 정부들도 이런 수법을 애용한다.

기존 정부들이 말하는 “법과 질서” 확립은 정치·경제 권력자들을 위한 기존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경제 파탄, 늘어나는 실업, 임금·복지 삭감, 생계비 위기로 인한 사회 불안정 등을 범죄, 이민자, 노동자 투쟁 탓으로 돌린다.

범죄에 대한 도덕적 공황을 이용해, 자본주의 체제와 그 체제를 수호하는



권력자들을 위한 기존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뜻 지난해 6월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를 체포하는 경찰

정부들이 저야 할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는 것이다. “법과 질서”는 기성 질서에 도전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억누르는 무기이기도 하다.

노골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정부처럼 국정을 운영하기 쉽지 않은 조건에서도 “법과 질서”가 대중 통제에 이용되는 것이다.

그런 성격 때문에 우파의 법치주의는 민주적 절차보다 법 집행의 효율성을 더 강조한다. 이정식도 노동개혁 관철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했다. 국회 내 세력 관계상 법 개악이 힘들면 행정부가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행령 통치도 애용한다.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이런 “법과 질서” 통치로 가장 유명한 것은 영국의 대처 정부(1979~1990년) 일 것이다.

대처가 모델로 삼은 것은 미국 공화

당 닉슨 정부(1969~1974년)였다. 닉슨은 흑인 인권 운동, 베트남 반전 운동 등을 잠재우려고 “법과 질서” 통치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미국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도 닉슨이었고, 인종차별을 부추기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운운한 것도 닉슨이었다.

대처는 경제 위기 상황에 집권해 노동자 운동 및 노동당 좌파와 대결해야 했다. 이 대결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각국의 우파 정치 세력들은 모두 대처를 칭송한다. 한국에서도 보수 언론들은 우파가 집권하면 늘 대처를 보고 배우라고 주문해 왔다.

대처는 이 싸움에 이기려고 경찰력 강화, 형량 강화, 사법 제도 개악을 정당화하려고 강력 범죄 공포와 소련의 안보 위협(“신냉전”)도 이용했다.

대처의 신자유주의는 “법과 질서”의 수호자인 국가의 억압적 수단들을 통해 관철될 수 있었다.

연막

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자유주의를 꺼내든 윤석열이 “법과 질서”를 앞세워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경찰·검찰의 수사권 활용을 늘리며, “북한 위협”을 과장하며 호전적 언사를 내뿜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최근 경찰이 발간한 《치안 전망 2023》 보고서도 범죄 공포를 부추긴다. 또한 국내 치안 전망에서 북한 위협론을 길게 서술한 것은 좌파와 저항 운동을 ‘중북’으로 몰아 공격하겠다는 신호다.

한편으로는 대중의 고통을 걱정하는 듯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를 단속하겠다고 한다. 노동부 장관 이정식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작동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대개 생색내기나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경찰·검찰은 (노동자 투쟁 탄압 때와 달리) 중대재해 기업주들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는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 사망자 수(828명)는 같은 해 5대 강력 범죄 사망자 수(356명)의 2.3배다. 이 356명의 절반 좀 미치는 수의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앞세운 윤석열의 경찰력·공권력 배치 우선순위로 이태원에서 하룻밤에 사망했다.

“민생 범죄” 강조는 경찰의 감시와 통제가 대중의 일상 생활 공간 깊숙이 뻗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핵심 목적이 있다.

요컨대, 윤석열의 법치주의는 경제 위기 고통의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고, 노동자 등 서민층 사람들의 생계와 권리를 공격하는 시도이자 이것을 정당화하고 그럴싸하게 감추려는 것이다.

김문성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2면에서 이어짐

모든 불평등 철폐

러셀은 장애인이 차별받는 까닭이 편견이나 물리적 환경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속성, 이윤을 위한 착취에 장애를 가진 몸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임을 반복해서 주장한다.

“장애인법과 같은 기회균등법은 장애인의 고용 장벽을 허물 수 없다. 기회 균등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편견 등이 제거되어야 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물적 생산 체제이므로, 그 발전 단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되든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 현대 생산양식이 지속되는 한 장애인 차별 또한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136~137쪽)

러셀은 장애와 노동뿐만 아니라 시설 격리, 제국주의 전쟁, 재해, 공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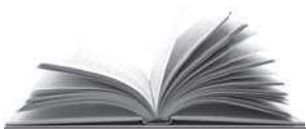
택, 조력 자살, 우생학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여러 사례와 통계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 논리 속에서는 장애가 필연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투쟁만이 장애(인) 차별, 배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한다. 따라

서 “정말로 ‘평등’해지려면 모든 불평등을 철폐해야 한다.”(94쪽)

장애가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거주하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문제의 근원과 투쟁의 방향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주는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김미연 초등 특수 교사, 전교조 조합원



서평 |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

일리 있지만 정치적 혼란이 심한 페미니즘 비판서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화두였던 ‘이대남’과 페미니즘 문제를 다룬 책이 새로 나왔다. 페미니즘에 날 선 비판을 가해 온 이선옥 작가(이하 직함 생략)의 신간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담담)이다.

저자는 청년 남성들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저자는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이 부흥하면서 공적 견해와 담론이 청년 여성 편으로 기울어 왔으며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담론의 장에 소외된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한다.

이선옥은 청년 남성들을 차별주의자, 극우 등으로 낙인찍는 것에 반대한다. 20대 남성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페미니즘에 반감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런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대남들이 다른 세대의 남성들에 견줘 성평등 의식이 가장 높다고 지적한다.

이런 지적들은 옳다. 페미니즘에 반감을 드러내는 청년 남성이 모두 성차별주의자나 보수주의자는 아니다. 20대 남성은 대부분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지한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표를 던진 청년이 다 우파인 것도 아니다. 이 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몇 달 만에 정부 지지를 철회한 청년 남성이 매우 많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을 느낀 청년 남성 중

일부가 대선 때 윤석열에 기대를 걸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얼마 안 가 실망하며 대거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페미니즘 비판

이선옥 저자의 페미니즘 비판에는 옳은 면이 일부 있다. 박근혜 퇴진 운동 성공 이래로 여성단체와 활동가 사이에 널리 수용되는 종류의 페미니즘은 남성 일반을 잠재적 성범죄자나 권력자로 취급하는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이다. 이런 페미니즘에는 성평등을 지지하는 청년 남성들도 반감을 보여 왔다.

저자는 페미니스트들의 이중잣대나 문화 영역에서 검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판한다.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와 ‘2가 가해’ 개념을 거부할 뿐 아니라,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개념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고도 비판한다. 가령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회계 부실과 활동 방식의 문제를 들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을 비판했을 때 여성단체들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 편을 든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저자의 일리 있는 페미니즘 비판에도 불구하고, 차별에 관한 서술과 정치적 방향성은 매우 혼란스럽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이용하려는 보수 우파의 성별 이간질을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이준석, 윤석열을 이대남의 대변자처럼 그리며, 여가부 폐지에 찬성한다. (이선옥은 2021년 7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를 옹호했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대한민국 이대남 보고서
이선옥 지음, 담담, 248쪽, 15,000원

고, 그 뒤에도 그와 공조해 왔다.)

‘젠더 갈등은 허구적인 담론일 뿐 페미니즘은 아무 문제 없다’는 페미니즘 측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맞다. 지난 대선 때 본지의 여러 기사에서 밝혔듯이, 남성 일반을 성범죄자나 성차별 가해자로 간주하는 주장과 실천은 남성과 여성 개개인들 사이에 갈등을 낳고, 사회적으로 젠더 갈등이 부각되는 데 일조한다.

그럼에도 이선옥처럼 페미니즘을 젠더 갈등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페미니즘에 반발하는 상당수 청년 남성이 가진 불만의 근원은 심각한 사회 불평등에서 비롯한다. 청년층의 최대 불만 사항인 일자리와 주택난, 생계난 등은 이윤 체제에서 비롯하며, 이 체제의 최

▶ 15면 상단으로 이어짐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wspaper.org/online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 10분 정리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투쟁 취재 영상
- 워시즘 강연 음원

총 470여 개 콘텐츠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다영코리아 현재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03

▶ 14면에서 이어짐

대 수혜자이자 수호자인 지배계급이야말로 젠더 갈등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게다가 보수 우파는 평범한 청년 대중의 고통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대중의 불만이 자신을 향하지 않도록 성별 이간질의 일환으로 페미니즘을 공격해 왔다.

페미니즘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하는 청년 남성들의 반응에는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이 남성 일반을 가해자, 일종의 특권층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담겨 있다.

하지만 불평등의 원인이 부와 권력이 극소수에 집중돼 있는 사회 체제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도 담겨 있다.

페미니즘의 모순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대체로 그 사상이 일관성 없음을 비판하는 수준에 그칠 뿐 피상적이다.

페미니즘은 여성 차별에 반대하지만 그 이론과 전략은 여성 차별의 원인과 여성 해방의 진정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 계급이 아니라 성별을 사회의 핵심 분단선으로 여기는 관점 때문에 여성 차별에 맞서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을 동침시키는 광범한 운동을 구축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성 차별을 유지하고 부추기는 체제에 효과적으로 도전하지 못한다.

게다가 사회적 기반의 협소함(중간 계급, 특히 지식인)과 이론적·정치적 약점 때문에 페미니즘은 보수 우파의 공세에 쉽게 취약해진다.

개혁주의적인 페미니즘 지도자들은 개혁 입법을 통해 성평등을 추구하는데, 사회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일부 페미니스트 지도자가 정치권과 공직에 편입되면 페미니즘의 애초 목표와 실제 현실 간 간극이 커지게 된다. 페미니스트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종종 여성운동의 압력을 의식하긴 해도, 자본주의 체제의 제약을 구현하면서 갈수록 온건해지며 평범한 여성 대중의 열망과 멀어진다.

남성 차별?

저자는 여성할당제와 여가부가 불공정하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심지어 이제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차별받는 시대가 됐다며 “국가기관의 신경계에 각인된 남성차별”을 말한다. 여성 할당제, 공공기관 승진 심사에 군 경력을 배제하는 지침(2021년 기획재정부 지침), 남성 징병제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이런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와 권력은 극소수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계급 문제를 무시한 채 여성 할당제와 여가부를 중심에 놓고 불공정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게다가 사회의 핵심적인 불평등을 가리며 우파의 성별 이간질에 이용되기 쉽다.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을 시행해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여성과 남성 모두의 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물론 여성 할당제가 평범한 여성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제도는 아니다. 저자의 지적처럼 할당제의 수혜자는 특정 정체성을 가진 집단 모두가 아니라 그 내부의 소수이다. 여성 정치인 수가 곧 민주주의 확대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맞다.

하지만 여성 할당제로 인해 남성이 차별받는다라는 주장은 단순한 비약이다. 사회 상층부에는 여전히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 한국은 서구에 비해 그 격차가 훨씬 더 크기도 하다.

다음으로, 남성 징병제로 평범한 남성들의 고통이 큰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 징병제가 여성을 우대하는 남성 차별적 제도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자 유지하는 계급적 차별이고 억압이다. 부유한 가정 배경을 가진 청년 남성보다 평범한 가정 배경을 가진 청년 남성이 훨씬 많이 징집된다.

공공기관 승진 심사 때 군 경력을 배제하는 지침이 군필 남성에게 박탈감



청년층의 최대 불만 사항인 일자리와 주택난, 생계난 등은 이윤 체제에서 비롯한다

을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승진은 극소수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군필자 모두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다. (군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더 합리적인 보상 방안이 있을 수 있다.)

2021년 초 기재부 지침으로 고위직 승진에서 남성이 불리해졌다는 주장도 별 근거가 없다. 2021년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¹

저자가 정체성 정치와 정치적 올바름(PC)을 “반문명적” 퇴행으로 비판하는 것도 지나치고 심지어 위험하다. 저자는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장애인 단체의 시위를 비난하며 소수자 정치를 공격한 것을 “일리가 있다”며 두둔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차별받는 사람들의 운동에서 채택되는 정체성 정치는 긍정적 측면과 약점을 함께 봐야 한다. 정체성에 호소해 차별에 맞서 스스로 싸우는 것에는 진보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체성을 중심으로 놓고 운동을 벌이는 방식은 차별에 맞서 광범한 대중 운동을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되고, 운동의 파편화와 분열을 야기하기 쉽다.²

‘정치적 올바름’(PC) 문제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이 용어는 차별적 언어 쓰지 않기, 언어 개혁, 소수자 우대 조치 등 여러 차별 개선 조치를 묶어서 일컫는 말이다. 정치적 올바름으로 불리는 여러 조치에는 차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게 많다.

그러나 정치적 올바름의 일부 측면은 과도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언어와 문화 면에서 과도한 면이 있다. 이런 문제는 좌파적 견지에서 비판해야 한다(자세한 설명은 본지 380호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을 보시오).

이 책의 페미니즘 비판은 일부 합리적 측면이 있지만, 지나침과 혼란이 많다. 차별을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관계들과 이를 지탱하는 핵심 제도들에서 떼어놓고, 경쟁 시스템 내에서 개인의 피해 문제를 중심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페미니즘의 반편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주장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 보수 우파에 이용되기도 쉽다.

정진희

1 2021년 규모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인 여성 임원 비율은 2020년보다 각각 2.5퍼센트포인트, 0.9퍼센트포인트 하락해 4.4퍼센트, 3.7퍼센트를 기록했다. 규모 1000명 미만의 공공기관에서도 여성 임원 비율은 3퍼센트포인트 하락해 7.1퍼센트를 기록했다(여가부).

2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책 《정체성 정치와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 —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책갈피)을 참고 하시오.

▶ 16면에서 이어짐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서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삭제했다. 그기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부처의 몫으로 떠넘겼다.

이태원 참사 직후 여론이 들끓을 때는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

령이 맞다”고 입에 발린 말을 했지만, 재난 발생 시 자신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를 진작에, 그것도 취임식 달 만에 없애 놓은 것이다.

최근 <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보면, 경찰은 참사 당일 저녁 8시 30분경 전

쟁기념관 담벼락에 부착된 윤석열 퇴진 손팻말을 철거해 달라고 용산구청에 요청했다. 이에 당직실에 있던 5명 중 2명이 저녁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철거 작업을 했다. 이태원 인파에 대한 신고가 빗발치던 시점이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임준형

1월 1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경찰청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참사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는 수사 결과를 내놔다.

사실 참사 직후 행안부 장관 이상민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참사였다고 주장할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의 질문으로 다시 드러난 것은 경찰이 올해 헬러워 기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운집할 것을 미리 예상했다는 점이다.

올해는 왜 필요한 경찰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을까? 서울경찰청장 김광호는 참사 당일 경찰 운용의 강조점이 마약 단속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마약 특별단속도 시작했고, 우리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하시면서부터 마약에 대한 특별 대책을 지시하셨다. 저희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장혜영 의원은 더 뒷선으로 책임을 따져 올라가지 않았지만, 경찰의 이런 우선 순위는 대통령 윤석열의 우선순위였다.

윤희근은 윤석열의 초대 경찰청장이고,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했다. 참사 5일 전에도 국무총리에게 “특단의 대책”을 주문

했고, 그에 따라 참사 3일 전 국무조정실은 마약류 관리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 결과 참사 현장에는 인파를 통제하고 구조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참사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유해진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원은 청문회에서 당시의 절박한 상황과 절망적인 감정을 토로했다.

“[28차례나 다급하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많지 않았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다.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고 너무나 외로웠다.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가 통제되지 않았다.”

그런 경찰이 유가족 감시에는 철저했다. 희생자 박가영 씨의 어머니 최선미 씨는 청문회에서 경찰의 소름 끼치는 감시 행태를 폭로했다.

“17살 아들이 트라우마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경찰의 잦은 연락 [때문에]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는데,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니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상담 다녀오셨더라, 저희가 연락하는 게 불편하셨냐’라고 얘기했다.”

참사로 예비 신부를 잃은 한 생존자는 “유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그런 모임은 만들어 주지 않았다. 이것 또한 2차가 해”라고 말했다.



자민 이태원

“뭘 해줄 것처럼 하더니...” 꼬리 자르기로 끝난 경찰 특수본과 정쟁으로 얼룩진 국조. 12월 3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모인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혹시나’ 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나’였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1월 17일 종료된다. 1월 12일 2차 공청회를 끝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고 결과 보고서 채택만 남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목소리를 낸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국정조사가 참사 항의 운동과 정부의 책임 규명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마약 수사와의 연관성이 재차 드러났지만, 새로운 진상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국정조사는 윤석열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주류 정당 간 정쟁으로 얼룩졌다. 유가족협의회 대표이자 희생자 이지한 씨의 아버지인 이종철 씨는 “국정조사를 보며 유가족들은 오히려 실망감과 좌절감을 크게 느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끊임없이 방해했다. 유가족 최선미 씨는 국민의힘 의원 조수진을 향해 “우리[유가족]에게 뭘 해줄 것처럼 하더니 아무것도 안 했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울분을 토했다.

그런데 국조특위장인 민주당 의원 우상호는 유가족에게 더 말할 수 있도록 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최선미 씨에게 자제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을 예산안 처리와 연동시키는 합의를 하는 바람에 시간을 까먹은 것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최선미 씨는 2차 공청회에서 참사 책임자들이 특수본 수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입을 닫아 버렸다고 일갈했다.

▶ 15면 하단으로 이어짐

이태원 참사

이란인 학생과 중동 전문가가 말한다

탄압에도 계속되는 이란 반정부 시위

1월 18일(수) 오후 8시

발제 **하미드레자** 이란인 학생, 청소년 권리 활동가
앤 알렉산더 중동 전문지 《미들리스트 솔리더티》 편집자

※ 전문 통역사의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참가신청

bit.ly/0118-meeting